

광주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실무협' 본격 가동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7일 오후 시청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실무협의체'를 구성, 첫 회의를 여는 등 본격 가동했다.

실무협의체는 보건복지부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가시화됨에 따라 광주가 보유한 치의학 관련 인프라와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한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박원길 광주시치과의사회장, 국민석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성훈 조선대학교 치과대학병원장, 이정환 광주보건대학교 교수, 강홍원 ㈜텐바이오 대표 등 의료·산업·학계·행정 분야 전문가 12명이 참석해 유치전략 및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대학과 병원을 통한 연구·인재양성 기반 ▲기업과 연계한 산업화 가능성 ▲인공지능(AI)·디지털 인프라 활용 융성 ▲광주테크노파크 등 혁신기과의 협업모델 구성 ▲국가균형발전 실현 측면의 입지 적성 등 광주의 유치 강점을 집중 논의하며 지역의 상대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전략도 함께 모색했다.

박원길 광주시치과의사회장은 "광주는 2012년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속적인 노



의료·산업·학계·행정 참여... 유치전략 협업방안 등 논의 지자체 최초 필요성 제기... 인프라·연구·임상 역량 우수

력을 이어왔다"며 "전국 11개 치과대학 중 2개(전남대·조선대)가 위치한 광주는 연구, 임상,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최적의 도시로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강조

했다. 이도안 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은 "치열한 유치 경쟁 속에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정기적 전략회의를 열고, 차별화된 유치 논리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대시민

홍보와 여론 형성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으며, 향후 후보지 평가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평가 기준에 맞춘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광훈 기자

화정아이파크 유족 대표 "살인기업 승승장구"

현대산업개발·민주당 규탄... 광주 시민사회 각성 촉구

안정호 광주화정아이파크 참사 유가족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을 규탄하며 광주 시민사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에서 5년 동안 붕괴 참사가 세 번 발생한 것은 현역 정치인들이 본인 치적에만 몰두하고 민생을 살피지 않아서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참사 사고를 기업과 업체의 잘못으로 떠넘기기에는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못된 정치인들은 말로만 '기억한다' '관심갖겠다'는 말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 강조한 산업현장 안전관리 명령에 대해 직무유기를 범하고 반항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15명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기업이 3년이 지나니 큰소리치고 있다. 심지어 참사 현장이 복구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광주 모처에서 재

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분주하다.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는 현산 말단 직원들의 처벌로 매듭지었고, 서울시는 솜방망이 영업정지를 내렸으나 현산은 가처분 신청에 승소장구하고 있다. 광주 시와 구청이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묻어 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또 "현산은 정몽규 회장이 직접 약속한 화정아이파크 참사 추모사업을 백지화하고, 추모식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있다. 기업의 이런 행태를 모두가 방관하니 시민들이 또 죽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 시민사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더 이상 광주 시민이 무서와 죽임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역사를 기억하고 바꾸지 않는다면 계속 그 역사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민규 기자

'에이즈 감염' 숨기고 피임 기구 없이 성관계, 20대 실형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처음 만난 상대와 성관계를 맺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처음 만난 B씨에게 자신의 HIV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임 기구 없이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성 접촉을 통한 다른 질환에 걸린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A씨의 HIV 보건 사실을 알았다. 다행히 B씨는 HIV에 감염되지는 않았다.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며, 가석방 기간

중 B씨를 만나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별건의 마약 범죄에 연루돼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재판장은 "B씨가 성관계 이후 감염 사실을 알고 큰 공포와 충격에 빠졌으며 업벌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를 보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처음에는 피임 기구를 쓰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이미 선고된 사건 판결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IV에 감염되면 면역세포가 파괴돼 폐렴·결핵·암 등 기회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까지 발병할 수 있다.

뉴스시스

지적장애인 등치고 성폭행범 무고 종용까지... 50대 실형

자신이 고용한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돈을 빼돌렸다가 고소당할 처지에 놓이자, 또 다른 직원에게 성범죄 무고를 종용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8일 무고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여)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윤씨는 2020년 아르바이트생 A씨에게 '지적장애인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하라고 꺾어 부추긴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사업 과정에서 자신이 고용한 지적장애인 B씨의 주택을 담보로 2억원 상당 대출을 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다가 고소 당할 처지에 놓이자 A씨에게 무고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아르바이트생 A씨를 대표이사로 등기한 뒤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경영했다. 윤씨는 A씨에게 '나는 도망가면 된다. B씨를 성폭행으로 처벌 받게 해야만 네가 살 수 있다'고 말하며 무고를 부추긴 것으로 검사는 봤다.

다행히 B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벗어 기소되지는 않았다.

뉴스시스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의 원인을 짚어보고 대책을 논의할 긴급토론회가 열린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 원인·대책 진단 긴급토론회'가 열린다.

지난 11일 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이 매몰돼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초

22일 광주시청서 대표도서관 붕괴 긴급토론회 민주당 정준호 의원 주재 붕괴 원인과 대책 진단

기 현장 보고서'에 따르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해 작성했어야 할 작업계획서의 제출 유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위험공정에 대한 사전작업 허가서도 지난해 10월28일 이후 제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장 안전점검이 총 7차례나 진행됐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다.

이에 긴급토론회에서는 공공 발주공사

의 구조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도서관 붕괴 사고에 대해 전문가 견해를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축구조기술사회 김영민 회장과 박홍근 포유건축사 대표가 발제를 맡아 500t에 달하는 고하중 위험부위 용접상태를 비전문가인 일반 감리에 의존하는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완공 후 뿐 아니라 시공

오권철 기자

"아들 채용" 청탁 금품 챙긴 신협 임원·조합원 징역형 집유

을 선고했다. 이들은 B씨 아들의 신협 채용 청탁 명목으로 총 1700만원을 건네거나 각기 받아 나눠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로부터 채용 청탁 대가를 받아 챙긴 A씨는 공범이자 또 다른 조합 임원인 3명

에게 300만원씩 건네고 스스로 5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B씨는 A씨가 아닌 다른 조합 관계자에게 따로 돈을 주며 취업을 추가 청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채용 청탁 비위는 B씨의 아들이 6개월 만에 퇴직한 이후 B씨가 조합 사

무실에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탄로났다.

A·B씨 등 이들 모두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깊이 반성하며 받은 돈을 돌려줬다' '아들의 취업을 위해 벌인 일이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장은 "A씨의 경우 B씨의 아들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해 부정 채용이 현실화됐고, 신협 부이사장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일부 피고는 받은 돈을 반환해 실제 챙긴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스시스

자녀의 직원 채용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신용협동조합 임원과 조합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8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신용협동조합 임원인 A(7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또 아들 채용을 청탁한 B(67)씨와 채용 면접 청탁을 주선한 조합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공범인 조합원 4명에게도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만원 등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